

농업소득, 20년째 1000만원으로 '제자리' 농협 책임판매 계획 '실패'

민주 이원택 의원 "농가소득 제고 위해
책임판매비율 50% 달성 위한 대책 마련을"

농업소득이 20년째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2000년 1,080만원에서 2020년 1,020만원으로 6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후 농협의 책임판매에 따른 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2년 농협경제



지주·금융지주회사 출범 등 사업구조 개편 이후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에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이상을 책임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농협이 세웠던 판매농협 구현 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1년 세웠던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4조9,500억원을 투자해 책임판매 비중을 2020년까지 10%에서 51%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농업경제 투자금액은 2조6,000억원으

로 목표대비 80%수준이다. 품목별 책임판매 계획 대비 달성 현황은 원예의 경우 26.6%로 당초 목표 대비 12.4%미달, 양곡은 45.5%로 13.5%미달이다. 축산경제 투자금액은 1조600억원으로 목표대비 64%수준이다. 품목 책임 달성 비율은 축산은 30.3% 달성해 33.7% 미달이다. 당초 농협이 계획한 만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2011년 농협은 산지 농축협 출하물량 50%이상을 경제지주가 책임판매 하겠다고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계획은 달성이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농가소득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당초 농협이 제시한 책임판매비율 50%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도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의료진에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공공 수어통역 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을 방문해 수어통역사들과 함께 코로나19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 의약품 공급자에 과징금 부과

이용호 의원 '공익적 목적 과징금 신설법' 대표 발의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수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의 의뢰기관 등에 대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상한 금액 일부를 감액(약가인하)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급여정



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과 아울러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업자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현행법 아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 과징금과 비교해 과징금 액수를 2배 내지 3배로 상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종전의 제재와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부과를 주변 상황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대부분은 복권기금과 건강보

험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보험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재난적의료비 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 대안으로 현행 약가인하와 급여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제재와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 부과·징수하는 '공익적 목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징수한 과징금은 연간 1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전액 취약계층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만 사용함으로써 저소득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있을 복지부의 약제 관련 소송에 따른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재난적의료비 재원확충으로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사각지대 없는 교육' ... 도의회 교육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16일 봉동초등학교 양화분 교장을 한국계입과학교를 방문해 작은 학교 운영현황과 전문계고교의 교육과정 등을 청취한 뒤 질의했다. 최영일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되는 시간이었다"면서 "마을특색을 살린 프로그램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성을 위한 열정을 직접 보고 느끼니 앞으로 어떤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다"며 참석자들과의 의견을 심도있게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김경수 의원은 "교육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작은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특색사업에 대한 지원과 사립학교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이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향후 교육위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며 "직접 방문을 통해 들었던 내용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작은학교 및 전문계학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소통하며 사각지대 없는 전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 경위 철저히 살피라"

문 대통령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와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정부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과거부

산하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0여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이 십여 차례에 걸쳐 약 100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도 수십 여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 주체 여부에 대해 "지금 현재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 공공기관이 전파진흥원, 한국농어촌진흥공사, 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투자한 걸로 보도되고 있다"며 "해당 공공기관이 속한 정부 부처가 있으니 1차 파악은 해당 부처가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투자 여부에 대한 조사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뉴시스

도내 한옥건축자산 관리 활용방안 공유

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대표의원 이병도)는 지난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연구회에서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목적으로 제안된 이번 연구용역은 한옥에 대한 가치 정립, 현황조사,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전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 및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회에서 의원 정책개발 연구 활동의 목적으로 제안된 이번 연구용역은 한옥에 대한 가치 정립, 현황조사, 유형분석 등을 통해 전북도 한옥 건축자산의 가치 판단 기준 및 관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의회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는 이병도, 나인권, 김대오, 정호윤, 이한기, 이정린, 조동용, 최영일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회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건축공학과)의 최종보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남해경 교수는 "도내 145채의 한옥을 조사해 평면, 기둥, 처마, 지붕 등 건축적 특성과 유형을 분석, 전북도 한옥이 가지는 특징 및 역사적, 공간적, 예술적, 지역문화적, 유지관리활용적 가치 기준을 마련했다"며 "한옥을 새롭게 짓거나 고칠 때 구조, 규모, 배치, 평면, 입면, 지붕, 공간구성에 대해 전북한옥의 특징과 가치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병도 의원은 "전북도에는 지역의 정체성과 시대적 역사성을 보유한 한옥이 다수 분포하고 있지만 한옥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미흡해 장기 간 방치된 채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한옥 건축자산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한옥의 신속, 보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북도만의 한옥 모델을 개발해 전북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개선과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건축자산 보전·활용연구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한옥 건축자산 관리·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도의회 행사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지 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16일 전북도가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중 전주, 김제, 완주 지역 4곳을 방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노송119안전센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표준양식장, 농업기후변화 대응교육센터, 전북도 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부지를 방문해 관련

부서로부터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 정책에 꼭 필요한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하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혁신창업허브 등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위원장 김승섭 의원)는 지난 16일 덕진구에 소재한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전주혁신창업허브' 및 팔복예술공장 '예술놀이 전주 포럼' 사업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서 기업지원 시설과 근로자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중소·창업 기업에 소규모 사무 공간 공간을 임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키워나가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하는 전주혁신창업허브를 찾아, 입주공공기관을 살펴보고 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창업에서 성장까지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예술 놀이의 가치와 중요성 확산을 위해 올해 두 번째로 열리고 있는 '예술놀이 전주 포럼'을 방문해 전시실 운영 및 행사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이중천 등 찾아 현장의정활동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주 의원)는 지난 16일 덕진구 우이동지역에 추진 중인 '이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4차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생태계 보호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건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총 300억원이 투입되어 2021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하천 상류부 폭이 좁아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도로와 인근 농지가 침수되고 제방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시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신도시개발 등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정체현상 등 각종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구간 중군 용진에서 전주 덕진구 우이동 구간 우회도로 4차로 개설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청취 후 시민 불편 사항 등을 점검했다. /김윤상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정읍시의회 제258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16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내 일제강점기 청산 등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황해속 의원은 '보천교에 대한 역사 인식 재고하자'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항일정신을 재조명했다. 이상길 의원은 '친일작가 작품이라는 총털사 이순신 장군 영정과 황토현 전복준 장군 동상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첫번째 5분 발언에 나서 '불법 이륜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 보호해야'라는 주제로 말했던 정상삼 의원에게서는 시민안전에 대한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 /정읍=김대환 기자